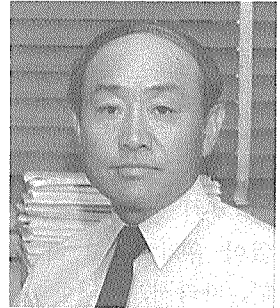


## “원자력은 왜 이렇게 말도 많은가?”



강 창 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원자력 산업은 현재 매우 혼란스럽다.**

요즈음 원자력과 관련한 모든 사업은 말도 많다. 한전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부지확보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굴업도를 지정 고시하고 추진하더니만, 결국은 활성단층의 징후를 발견하고 맥없이 물러나는 웃지 못할 사건으로 끝나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앙정부는 건설허가를 발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발급한 영광 원자력 5,6호기의 건축허가를 타당한 이유없이 갑자기 취소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잘 수행하고 있는 원자로 설계사업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분리하여 타 기관으로 이관한다고 힘을 낭비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도 이미 원자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하여 잘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갑자기 번복하여 사업자에게 돌

려줌으로써 정부의 당연한 의무를 포기하는 웃지못할 정책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차세대원자로 개발은 과연 잘 추진될 수 있겠는가. 또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북 경수로 지원에서 혹시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된다.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꼬이고만 있다. 20년 가까운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무려 18기의 대형 원자력발전소를 운전/건설중에 있는 원전대국에서 왜 이렇게 모든 일마다 근래에 와서 하나같이 말이 많은가?

**국민 의견수렴의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는 반드시 여러 상충된 의견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의견의 제시는 당연하다. 그러나, 각자의 의견을 끝까지 고집함으로써 팽팽히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경우, 때로는 과격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아무 결실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아 왔다.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혼돈상태의 일반대중으로부터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일반대중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잠재 위해시설을 아무 대가 없이 유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NIMBY : not-in-my-backyard)라고 매도하기 보다는, 보상의 의미로서 해당 지역사회 발전이나 지역주민 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필요한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이 사업을 가장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대중의 합의를 얻었다고 하여, 해당 지역주민 개인의 인권이나 이익이 유린된다든가, 혹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게 된다면 아무리 국가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참여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는 국가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발전과 차질없는 국가의 중요 정책수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적절히 고려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제반 사항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는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청회 제도가 있다.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해당인의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부당한 분규를 막고, 법제화된 절차를 통하여 체

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여는 장으로서 공청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공청회의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번복할 수 없는 법률적 힘을 가진다. 국가 차원의 필수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구는 공청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법제화된 공청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직속 기구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설치된 위원회는 원자력 시설 건설 및 운전의 인허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성은 물론 국민 이해를 최종 점검하도록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존의 원자력위원회와 별도로 설치하며, 100%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하게 하여, 각 프로젝트 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 중에 적절한 위원 3명(1명의 위원장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소유한 재판관)을 임명하여 공청회라는 법적인 대화의 장을 운영하게 한다. 이 공청회를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와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 지방정부를 비롯한 제반 지역주민 및 단체로 하여금 각자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고,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종합적인 판단과 결론을 내리게 한다. 최종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이 공청회는 바로 사업자,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자력 행정체계의 재정비는 최우선이다.**

원자력 사업을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종합적인 원자력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립된 정책을 일관성있고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나갈 강력한 체계의 확립이 절실하다. 이러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단계로 정부 차원의 원자력 행정체제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번째 단계로서는 일원화된 행정체제를 통하여 국가 장기정책을 수립하고, 세번째 단계로 이 정책에 의거하여 각 기관별 기능 및 기관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제한된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일사불란한 사업의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국산화를 극대화시키고, 산업체의 자유경쟁체제 확립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이고 신뢰성있는 안전규제를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상응하는 체계의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의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동안 원자력 행정 조정능력의 부족으로 국가 차원의 원자력 이용개발 장기정책 수립, 시행 및 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원자력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 수행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상산업부는 에너지 정책을, 과기처는 원자력 정책을 각각 따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부처는 우선 장기 원자력 정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대립양상을 보이고, 각종 역할 분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구와 설계사업의 분리가 반복해서 논의되어 왔고, 중장기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재원의 확보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

다. 부처간에 업무가 중복되고, 정부 내에서도 상반된 각종 업무 지시 등으로 혼란을 야기시켜 원자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자력 산업에서 가장 중추를 이루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각각 두 부처의 산하기관으로서 해당부처와 부화뇌동하여 모든 분야의 역할 분담에서 서로 침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 원자력 행정업무의 일원화만이 해결책이다.

1991년 국가기술자문회의는 “원자력 행정업무 조정”이라는 프로젝트를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추진한 적이 있다. 당시 원자력 각 분야 전문가들은 집중적으로 4차의 토론회를 거친 후 원자력 행정업무 일원화(안)만이 원자력이 앞으로 살 길이라고 결론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은 아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초 1996년 1월 11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하여 원자력 행정 일원화를 대통령에게 또 다시 보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핵심을 벗어나서 엉뚱하게 방사성폐기물사업을 사업자에게 돌려주고 어렵게 성취한 방사성폐기물기금을 정부 자신이 포기하는 웃지못할 결과만 초래하였다. 결국 앞으로 한 발짝씩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여러 발짝 뒤로 퇴보하는 결과만을 내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러한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원자력행정업무의 일원화”라는 원론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우리는 학수고대할 뿐이다.